

경제관계장관회의
26-1-1
(공개)

모두의 성장을 위한
대·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

2026. 1. 21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추진배경	1
II. 추진방향	2
III. 세부 추진과제	3
1. 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	3
2.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	5
3. 상생 생태계 확장	10
IV. 추진계획	12

I. 추진배경

- 한미 관세협상, UAE 순방, APEC 등에서 괄목할 경제성과 창출
 - 한미 관세협상 타결(對美 자동차·부품 관세 25→15% 인하 등), AI 핵심 자원(최신 GPU) 확보* 등 통상·공급망 여건 개선
 - * 최신 GPU 26만장(정부5만장, 네이버6만장, 삼성전자5만장, SK5만장, 현대차5만장) 확보(APEC)
 - 원전·방산 등 해외진출 기반 확대* 및 수주 성과**도 거양
 - * 원전·방산·첨단산업·K-컬처 4개 분야 전방위 경제협력 강화(UAE 순방)
 - ** 5.6조원 규모 천무 유도 미사일 3차 공급계약 체결(폴란드)
- 대규모 수주·해외진출 등 경제성과는 대기업 자체 노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업체 및 정부 지원의 공동 성과

➔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 등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기업·벤처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시켜, '모두의 성장'을 뒷받침할 필요

* VIP, "경제외교 성과가 중소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확산 전략 마련" (제16차 수석·보좌관 회의, '25.11.27)

- 대·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*에도 불구하고, 실질적 성과 확산 및 생태계 고도화에는 한계 노출

* 「상생협력법」 제정('06년), 동반위원회 설치('10년),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('23년) 등

① 순방 등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기업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한계

② 대기업의 해외 현지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기업 납품구조 변동*, 中企 기술탈취** 등에 따른 대→중소기업 성과 확산 경로 약화

* 조달경로의 국내→해외(현지 협력사) 대체, 공동 R&D·협업 등 협력 기회 축소 등

** 年 약 300건, 평균 손실액 18억원 추정(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, '24년)

③ 기존 상생협력 생태계가 제조업 중심*으로 구축되어, 플랫폼·금융·방산·기후 등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 미흡

* 업종별 상생협력기금 출연 비중(%) : (제조) 51.0 (건설) 9.1 (유통) 8.9 (IT) 3.3 등

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'모두의 성장'을 위한 "대·중소 상생 성장전략" 마련·추진

II. 추진방향

비전

대·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
‘모두의 성장’ 구현

3대
방향

- ① 관세협상·순방 등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·확산
- ②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
- ③ 플랫폼·금융·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

3대 방향	주요 추진과제
1 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대·중소기업 대미 투자프로젝트 지원 2배 확대 2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·확산 3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.5조원 이상 조성 4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
2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정부 확보 GPU 중소·스타트업 약 30% 배분 2 대기업 지식·기술·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 3 성과공유제·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5 기술탈취 기업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
3 상생 생태계 확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(플랫폼) 동반성장지수 평가 편입 추진 2 (금융) 상생금융지수 도입 3 (방산)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신설 4 (원전) 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5 (기후)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 6 (지역·안전) 지역경제·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

【 주요 기대효과 】

- ◇ 상생 생태계 : 제조 중심 → 플랫폼, 방산, 금융 등 확장
- ◇ 상생협력기금 : '16~'25년 2,663억원 → '16~'30년 3,000억원
- ◇ 상생금융 : '25년 1조원 → '26년 1.7조원+a(지속 발굴·확산)
- ◇ 상생결제 : '25년 189조원 → '30년 230조원
- ◇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: '24년 49점 → '30년 65점(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)

Ⅲ. 세부 추진과제

1 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

◇ 대기업 중심의 수주·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개척·진출 확대 및 성장자본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·확산

① [동반진출] 수주·수출 성과를 中企 해외개척·진출 기회로 활용

- (해외 동반진출 ① : 재정지원) 대·중소기업이 對美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동반진출시 정부지원 2배 확대 중기부
 - * (당초) 대·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, 3년간 최대 10억원 → (확대) 對美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(그 외 15억원) + 보증 200억원 연계
- (해외 동반진출 ② : 금융지원) 수출지원기관(수은, 산은, 무보 등) 수출·수주금융 지원시, 대·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* (한도·금리 등) 재경부+금융위+산업부
 - * 예) 수주·수출 성과의 환류·확산 방안(예: 국내 협력 중소기업체를 통한 현지 설비·자재 공급 등)이 구체화된 대·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정책 금융지원 한도·금리 우대
- (글로벌 공급망) 대기업 현지진출 확대 등에 대응해 협력업체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지원하고, 공급망 장벽 대응 역량 강화 산업부+방사청 등
 - 방산 등 분야 협력업체 글로벌 인증(수출대상국 요구 규격·인증 등) 획득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방사청
 - * 예) GVC 30 프로젝트 사업 :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분석을 통해 국내 방산 분야 중소기업 실증시험, 해외 마케팅 등 공급망 지원(26년 301억원)
 -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선정(200개, ~30년)해 현지진출·M&A 등 패키지 지원*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도약 지원 산업부
 - * IP 해외출원 비용 지원, 컨설팅, 현지 법률 검토 등 현지진출 패키지 지원, 미래차 부품기업 M&A 자금지원(인수금액의 최대 60%, 200억원 한도) 등

- 글로벌 공급망 장벽(예: EU 공급망 실사지침* 등) 대응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(Data Space) 구축** 추진(~'28년) 산업부

* EU 진출기업에 공급망 전반(협력사 포함)에 걸쳐 인권·환경 실사 의무 부과
→ EU 진출기업 국내 협력사의 실사 대응 부담 발생

** 중소·중견 협력업체가 Data Space에 인권·환경 실사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면
원청사(대기업) 플랫폼에 데이터가 자동 연동·제공 → 협력업체 실사 부담 경감

② [상생금융] 대기업 기여 등을 활용해 생태계에 성장자본 공급

- (상생금융 프로그램) 대기업·금융권이 출연하고, 보증기관(산·기보, 무보 등)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 및 확산
(현기차-금융권-협력사 사례: 당초 1조원 → 확대 1.3조원 규모) 산업부+중기부+금융위

현기차-금융권 상생금융 프로그램

저금리 대출 (2,00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신보) 국민銀 50억원 출연 × 20배수 = 1,000억원 ▶ (기보) 현대차 50억원 출연 × 20배수 = 1,000억원
보증서 발급 (8,70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신보) 현대차·금융권 160원 출연 × 15배수 = 2,400억원 ▶ (무보) 하나銀 215억원 출연 × 20배수 = 4,300억원 ▶ (무보) 현대차 100억원 출연 × 20배수 = 2,000억원
회사채 발행 (2,25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신보) 현대차 70억원 출연 × 32배수 = 2,250억원

- 포스코인터내셔널 출연(10억원) 및 신보 보증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신설(’26.1월~) 금융위
- 포스코(50억원)·기업은행(150억원) 출연 및 무보 보증을 통해 4,000억원 규모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공급(’26.1월~) 금융위+산업부
-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에 출연시, 출연금의 5~10%를 법인세에서 감면*하는 세액공제 신설 재경부

* 중견기업 지원 목적 5%, 중소기업 지원 목적 10%, '28.12.31까지
(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신·기보 출연금에 대해서는 10% 법인세 既 감면 중)

- **(상생협력기금)** 향후 5년간('26~'30년) 상생협력기금 1.5조원 이상 조성(연평균 조성규모 : '16~'25년 2,663억원 → '26~'30년 3,000억원 이상) 중기부
- **상생협력기금 출연 유도를 위해,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*하고, 금융회사, 방산 체계기업(대기업) 등에 인센티브 등** 부여** 중기부+방사청
 - * 상생협력기금 전체 집행액 중 정부매칭 사업(상생협력기금→정책사업 출연시,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) 비중 확대 : ('24년) 14% → ('30년) 20%
 - ** 예)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우대, 방산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·증가율을 상생수준평가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 등 검토
- **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지원 용도를 기존 협력사 위주에서 非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** 중기부
 - * (現)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(관)(민간, 공공)이 지원용도·대상 지정(협력사 위주로 지원) → (改) 상생협력기금 내 공동협력사업(非협력사 스마트제조AX, 소상공인 등 지원)을 신설하고, 지원대상 중소기업·소상공인은 공모를 통해 선정
- **(전략수출금융기금)** 대규모 수주를 충분히 지원하고,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'전략수출금융기금' 신설 재경부
- **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·중견 등 생태계로 환류**(근거법 제정, '26.上)

- ▶ (재원) 정부 출연·보증 + 정책금융기관 출연 + 수혜기업 기여금 + 정부납부 기술료
 - ▶ (운용) 대규모, 장기·저신용 수출금융(대출·보증) + 수출기업 등에 대한 투자

2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

◇ **공동 기술개발·협업, 성과공유제·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**

1 [공동 기술개발·협업] 지속 가능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

- **(GPU) 정부 확보 GPU(5.2만장) 중 '25년 추경 활용분(약 1만장)을 중소·스타트업에 약 30% 배분 추진**(사용료: 시장가격의 약 5~10%) 과기부
- **정부 GPU 공급(GPU 확보사업,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) 과기부 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(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) 간 연계 과기부+중기부 추진**
 - * 정부 확보 GPU 중소·스타트업에 배분, 국가 AI 컴퓨팅센터 중소·스타트업 활용 촉진 등

- **(지식 확산)** 정부·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지식·기술·노하우(장비 배치, 경영 기법 등)를 중소기업으로 확산^{*중기부}
 - * (現) 상생협력기금으로 상생형 스마트공장, 안전보건, 상생 ESG 등 민관 공동 전략 등으로 개별 사업에 특정된 지식 공유에 국한 → (改) 상생협력기금에 지식확산형을 신설하여 장비 배치, 경영 기법 등 일반 지식의 확산 촉진
- **(스마트공장)** 대기업·공기업을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* 확대('25년 340억원→'26년 400억원)^{중기부}
 - * 대기업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중소·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,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(기업당 최대 1.2억원 한도)
 - **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**('25년 8개사 → '26년 20개사) 및 **국비분담 지원 확대**^{*중기부}
 - *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비 분담률(% 정부대기업중소기업) : (일반형) 30:30:40 (AI분야) 50:20:30
 - **대·중견·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제조 AI를 개발·현장 적용하는 대·중견·중소 협력 AI 팩토리 구축**(100개, ~'30년)^{산업부}
- **(개방형 혁신)** 민관협력형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 지원을 확대('25년 200억원→'26년 242억원)하고, 단계별 성과기반 지원체계* 구축^{중기부}
 - * 지원내용 : (매칭)협업 파트너 매칭 → (기술검증)과제해결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(기업당 최대1.4억원 지원) → (시장검증, 신설)후속 시장검증 지원(기업당 최대2억원 지원)
- **(인력양성)** 대기업 AI 인프라·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* 신설('26년 2,000명 양성 목표)^{노동부}
 - * '26년 예산 100억원(20개소 공동훈련센터 지정 × 개소당 100명 양성 계획)
 -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 제고 및 협력 중소기업에의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대·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확대* 추진^{중기부}
 - * 대·중견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 실시, 협력 중소기업 취업 연계('26년 30억원)
 - ↳ ('25) LG CNS, 포스코 등 13개 → ('26)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 등 확대 추진
- **(공동 R&D)** 중견기업과 중소기업(2개 이상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R&D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확대^{*산업부}
 - * '25년 156억원(5개 과제) → '26년 252억원(15개 과제)
 - 중견·중소 컨소시엄 내 환류 경로 강화를 위해 **현금배분, 물량확대 등 성과공유계약 의무화**(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 등)^{산업부}

- **(데이터)** 대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**데이터 바우처*** 지원('26년 94억원)^{과기부}
 - * 데이터 공급기업(대기업 등)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구매·가공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(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)

② **(상생협력 기반 강화) 대→중소기업 성과 환류 생태계 기반 강화**

- **(성과공유제)**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수·위탁 거래에서 플랫폼·유통·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^{중기부}
 - * (現) 수위탁기업 → (改) 플랫폼, 유통, 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(「상생협력법」 개정, '26.5)
- 성과공유 유형* 중 현금·현금성 공유(지식재산권 공유 등)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·개선^{**중기부}
 - * ①현금 공유, ②현금성 공유(지식재산권 공유 등), ③물량 확대
 - ** (現) [현금·현금성]공유 금액만 인정 + [물량확대]발주계약 금액 전체 인정 → (改) [현금·현금성]공유 금액 2배 인정 + [물량확대]신제품·신기술 개발에 한해 위탁 기업이 발주한 금액만 인정, 그 외(단가절감, 성능개선 등)는 현금 공유액만 인정
- **(상생결제)** 상생결제 지급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공공 하도급 계약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^{공정위+국토부+중기부 등}
 -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*(0.15~0.5%) 일몰 연장('25년→'28년)^{재경부}
 - * 상생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의 0.15~0.5%를 법인세에서 공제(최대 10%)
 - ※ 세액공제율(%) : (15일 이내 지급) 0.5 (16~30일) 0.3 (31~60일) 0.15
 -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 상생결제 지급에 대한 정량평가(0.3점) 반영^{행안부}
 - 공공 하도급(건설·제조·용역)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제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단계적 의무화^{*공정위+국토부 등}
 - * (現) 공공 건설 하도급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(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) → (改) 건설 포함 제조·용역 분야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
- **(동반성장평가)**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 우수기업(관)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동반성장평가 내실화 추진^{중기부+동반위}
 - 금융·플랫폼·방산 등 특화분야 지수 산정·발표^{*동반위}
 - * (現) 동반위 평가(50%)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(50%)를 합산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 → (改) 금융위(금융), 방사청(방산) 등 협업을 통해 특화분야 별도 개발·산정

-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·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방안* 마련 중기부+동반위
 - * (現) 수·위탁 실태조사 및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,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
-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34개 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('25년 기준 331개 기관)으로 단계적 확대* 중기부
 - * (現) 공기업 전체 31개, 준정부기관 전체 57개, 기타공공기관 46개 대상 실시
→ (改) 기타공공기관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('26년) 후 단계적 확대(~'30년)
-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동반성장평가 반영 지표 배점 확대* 재경부
 - * 공기업(SOC·에너지) 1.5→2점 / 공기업(산업진흥·서비스) 2→2.5점 / 준정부기관 1→1.5점
- **(납품대금연동제)**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(전기·연료 등) 경비까지 확대* 중기부+공정위
 - * 「상생협력법」 본회의 통과('25.11.13, '26.12월 시행), 「하도급법」 법사위 통과('25.12.3)
-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수·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 중기부
- **(피해구제기금)** 불공정거래 행위 소비자·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구제기금* 설치 방안 마련('26.上) 공정위+중기부
 - * (재원)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(年 5,000억원 수준) 일부(20% 이내) (용도) 소송지원, 분쟁조정지원, 자금지원,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등
- **(중소 협상력 강화)**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*하고, 협상에 필요한 행위(거래조건 협의 등)에 대한 담합 예외 인정 중기부+공정위
 - *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과 단체적 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(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개정)
- **(사회연대경제)**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(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) 간 협력사업 발굴, 사회연대경제조직 물품 우선구매 등 상생협력 지원 행안부
- 사회연대경제 민간기금*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독려
 - * 법인·기업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투·융자 지원, 사회가치 창출 목적의 자금공급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금

③ [기술탈취 근절] 대응체계 강화 및 행정처벌·제재 강화

- **(대응체계)** 한국형 증거개시제도* 도입,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 대응체계 강화 중기부+공정위+지재처 등
 - *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→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
 - 중소기업 관련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기술탈취 합동 대응단* 구성·운영('26.1월) 중기부+공정위+지재처 등
 - *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
 - 「IP 법률지원단」을 신설*('26.下)해 초기 분쟁대응(경고장 발송 등) 부터 심판·소송 대리, 분쟁조정 등 통합 지원 지재처
 - * 「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법」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
- **(손해배상 현실화)**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(최대 5배)의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* 중기부
 - *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 배상액 산정시 반영, 손해액 산정 가이드 마련·배포
- **(수사·조사 강화)**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(現 25명), 수사·조사기관 대상 기술자문 제공 지재처
 - 기술보호 감시관* 제도 도입·운영 및 익명제보 활성화 공정위
 - *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, 전기·전자, 자동차,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 → 불법행위 정보 수집
- **(제재 강화)**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 중기부+공정위
 - 행정제재를 시정명령, 벌점 등으로 확대(現 시정권고만 규정)하고,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(최대 50억원) 도입 중기부
 - *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개정('26.下)
 - 기술탈취 빈발 업종(기계, 차부품 등) 직권조사 강화(연 2→3회) 공정위

3

상생 생태계 확장

◇ 대·중소기업 **상생협력 생태계**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**플랫폼, 금융, 방산, 원전, 기후, 지역·산업안전** 등으로 확장

① **(플랫폼)**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(최혜대우요구 등)에 엄정 대응하고,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검토 공정위

-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* 추진 중기부+동반위

* 평가대상 : (現) 제조·건설·유통업 등 250개사 → (改) 온라인플랫폼 기업 추가

② **(금융)**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상생을 평가하는 **상생금융지수 도입***(‘26년) 및 **포용·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**을 위한 **자금공급 확대**** 금융위+중기부+동반위

* (평가대상)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(기업·국민·하나·신한·우리·농협)부터 단계적 확대 (추진일정) 평가지표 마련(~’26.上) → 시범 평가(’26.下) → 본 평가(’27)

** 민간금융권 생산적금융 525.5조원(국민성장펀드 투자 52조원), 포용금융 77.5조원

③ **(방산)** 체계기업(대기업)과 방산 스타트업간 **협업 촉진** 방사청+중기부

-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를 신설(’26년, 비공표)*하고,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**를 마련해 **상생협력 생태계 조성** 방사청+동반위

* 한화오션, 현대로템,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

** 평가 우수기업 대상 방산원가, 절충교역, 이차보전 분야 인센티브 검토

- 공모형 획득제도* 도입 방사청, 군·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실증시험 지원 중기부+방사청

* (現) 군이 성능·전력화 시기 등 결정 → (改) 스타트업 등이 성능·획득계획 제안

④ **(원전)** 원전 중소·중견기업 공급망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·인증·마케팅 비용 지원(’26년 45.3억원) 산업부

- 美, 튀르키예 등 원전 수주 유망국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공급사와 B2B 미팅 지원 ^{산업부}

⑤ (기후) 대기업-협력업체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* ^{기후부}

*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(환경산업기술원) 이차보전 지원 대출공급 한도액 : (現) 최대 2조원 → (改) 최대 30% 가산(최대 2.6조원)

- 중소·스타트업 등의 기술·아이디어를 대기업의 탄소감축 문제에 활용(개방형 혁신, '26년 10개사) ^{기후부}

- 대·중소기업 녹색수출 원팀 체계*를 가동해 대기업 해외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하는 패키지형 수주모델 구축 ^{기후부}

*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구성·출범('23.1월), 74개 기관 참여 중

⑥ (지역·산업안전)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안전 관련 상생협력 강화 ^{노동부·동반위}

- 지방정부의 중소기업·특화산업 지원과제에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* + 참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대** ^{동반위}

* 시도별 특화산업·전통시장 지원 등 과제 발굴(지방정부) → 대기업 수요 발굴 통해 대기업-지방정부 매칭(동반위) → 대기업-지역 중소기업 협력(동반성장지수 우대)

** 지역사회 동반성장 배점 확대(현행 1점) 등 우대방안 검토

-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*을 건설업 포함 소업종으로 확대 ^{노동부} 하고, 동반성장지수 평가 신규 반영 추진 ^{동반위}

* 모기업(100인 이상)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시 정부가 50~70% 매칭 지원

** (現) 건설업 제외 모든 업종 지원 중 → (改) '26년부터 5개 종합건설사 및 50여개 협력업체 대상으로 시범 운용 후 확대 검토

◆ 대통령 주재 「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*」 신설해 추진과제 점검

* 중기부-동반위 주관, 10대 그룹 및 협력사, 경제단체·학계, 관계부처 등 참여

IV. 추진계획

정책 과제	추진시기	부처·기관
1. 직접적 성과 공유·확산		
▶ 대·중소 對美 동반진출시 정부지원 2배 확대	'26.	중기부
▶ 수출·수주금융 지원시, 대·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	계속	재경부, 금융위, 산업부
▶ 중소·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 구축 추진(~'28년)	'26.1/4~	산업부
▶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·확산	'26.~	산업부, 중기부, 금융위
▶ 상생협력을 위한 무보 출연금 법인세 5~10% 감면	'26.1~	재경부
▶ 상생협력기금 향후 5년간 1.5조원 이상 조성	'26.~'30.	중기부
▶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(근거법 제정)	'26.2/4~	재경부
2. 대→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		
▶ 정부 확보 GPU(5.2만장) 중 '25년 추경 활용분(약 1만장)을 중소·스타트업에 약 30% 배분 추진	'26.1/4~	과기부
▶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 및 국비분담 지원 확대	'26.	중기부
▶ 대·중견·중소 협력 AI 팩토리 구축(100개, ~'30년)	'26.~'30.	산업부
▶ 민관협력형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 지원 확대	'26.	중기부
▶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('26년 2,000명 양성 목표)	'26.~	노동부
▶ 대·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	'26.	중기부
▶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확대	'26.	산업부
▶ 중소기업·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	'26.	과기부
▶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 ('상생협력법' 개정)	'26.上	중기부
▶ 성과공유 유형 중 현금·현금성 공유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·개선	'26.1/4~	중기부
▶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0.15~0.5%) 일몰 연장('25년→'28년)	'26.1~	재경부
▶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 정량평가(0.3점) 반영	'26.下	행안부
▶ 공공 하도급(건설·제조·용역)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제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단계적 의무화	'26.~	공정위, 국토부 등
▶ 금융·플랫폼·방산 등 특화분야 지수 산정·발표	'26.~	동반위
▶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·중견기업 실질적 우대방안 마련	'26.~	중기부, 동반위

▶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(現 134개) 단계적 확대	'26.~	중기부
▶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동반성장평가 반영 지표 배점 확대	'25.9	재경부
▶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	'26.12~	중기부, 공정위
▶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 수위탁 직원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	'26.1/4~	중기부
▶ 피해구제기금 설치방안 마련	'26.上	공정위, 중기부
▶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및 협상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담합 예외 인정(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개정)	'27.上	중기부, 공정위
▶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사업 발굴 등	'26.	행안부
▶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(「상생협력법」('26.上), 「하도급법」('26.下) 등 개정)	'26.上~	중기부, 공정위, 지재처
▶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(「상생협력법」('26.上), 「하도급법」('26.下) 등 개정)	'26.上~	중기부, 공정위
▶ IP 법률지원단 신설	'26.下	지재처
▶ 손해배상액 산정시 기술개발 투입 비용도 반영	'26.下	중기부
▶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(現 25명) 확충	'26.~	지재처
▶ 행정제재 확대(現 시정권고→ 改 시정명령, 벌점 등) 및 중대 위법행위 대상 대규모 과징금(최대 50억원) 도입 (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개정)	'26.下	중기부

3. 플랫폼·금융·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

▶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추진	'26.	중기부, 동반위
▶ 상생금융지수 도입	'26.	금융위, 중기부, 동반위
▶ 포용·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	'26.	금융위
▶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신설 및 상생수준별 인센티브 마련	'26.3/4	방사청, 동반위
▶ 공모형 획득제도 도입	'26.下~	방사청
▶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실증시험 지원	'26.	중기부, 방사청
▶ 원전 중소·중견기업 공급망 강화 및 해외진출 컨설팅·인증·마케팅 비용 지원	'26.	산업부
▶ 대기업 협력업체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	'26.	기후부
▶ 대·중소기업 녹색수출 원팀 체계 가동	'26.	기후부
▶ 지방정부의 중소기업·특화산업 지원과제에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 + 참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대	'26.1/4~	동반위
▶ 대·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건설업 포함 소업종으로 확대 + 동반성장지수 평가 신규 반영	'26.1/4~	노동부, 동반위